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구조 뜯어 고친다

대형가맹점 결제액 0.5%초과 혜택 ‘法으로 금지’

카드사 경쟁력 제고방안

요구자·제공자 처벌법 개정 검토 ‘경쟁력 강화’ 신사업규제 일부완화

그동안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이나 법인회원에겐 줬던 과도한 혜택이 법으로 금지된다.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주범으로 꼽혔던 고비용 마케팅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4면>

이와 함께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CB)업 등은 허용기로 했지만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TF)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앞으로 대형가맹점이나 대형법인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는 제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정부가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제한하고, 카드상품의 사전 수익성 분석은 강화하는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여전법 시행령을 고쳐 법인회원에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어길 경우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

대형가맹점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여행경비 등을 제공하면 부당한 보상금으로 간주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사업 관련 규제는 일부 풀어준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입법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영업행위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과 개인사업자 CB업은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카드사의 경영을 허용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금융상품을 자문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은 그간 금융 역력이 많지 않아 신용등급 산정에서 불리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렌탈업무는 사업자 대상 렌탈(B2B)에 한해 대상 물건의 제한을 없애되 리스자산 잔액범위 내에서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중소 렌탈업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전법

회 내 자율규제 심의 등 절차를 마련·운영할 방침이다.

다만카드업계가 요구했던 기존 서비스 축소는 향후 협의과제로 미뤄졌다.

최 위원장은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류방향을 밝혔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핵심 과제였던 레버리지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부가서비스 유지의 무기한이 이미 경과되고 수익성이 악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할 수 있도록 세부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노조는 10일 지도부회의를 통해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드노조는 전날 총파업 결의대회 열고 당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상미·홍민영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등 현황>

(단위 : 억원, %, 건)

구분	연간 수령액			수령 계약수			계약당 수령액	
	'17년	'18년	증감률	'17년	'18년	증감률	'17년	'18년
보험	14,635	18,689	27.7	596,791	732,480	22.7	245만원	255만원
신탁	4,740	5,022	5.9	85,059	86,128	1.3	557만원	583만원
펀드	1,918	2,673	34.4	31,415	37,450	19.2	610만원	714만원
총계	21,293	26,384	23.9	713,265	856,058	20.0	299만원	308만원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계약보다 해지 더 많아

적립금 135.2조... 전년비 4.9% ↑ 국민연금+연금저축, 61만원 불과

연금저축 적립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금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으로 여전히 노후에 대비하기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에 대해 실제 수익률 공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협의할 방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으며, 신탁과 펀드가 각각 12.7%, 9.0% 등이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수령액도 늘었지만 월평균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 늘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연간 308만원이다. 월평균 26만원이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절반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80.5%를 차지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 7000건으로 전년 대비 15.3% 줄었다. 규정 개정으로 연금신탁의 판매가 중단되면서다.

같은 기간 연금저축 해지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 대비 해지계약이 감소지만 신규계약 유입이 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해지계약건이 신규계약건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도 다소 늘었다. 중도해지 금액은 환급금 기준 총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이라며 “제도개선과 통합연금포털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제지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골드만삭스 등 금융사 4곳 ‘불법 공매도’

금감원, 처벌수위 경미→보통 상향 4곳에 과태료 각각 4800만원 부과

골드만삭스 계열사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는 국내에서 벌써 세번째 적발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를 열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골드만삭스 자회사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 I)에 공매도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 모니터링 결과 드러났다.

조양호 회장, 이르면 주말께 국내 운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르면 주말쯤 국내로 운구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지난 8일 새벽 미국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국내 운구를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국내 운구를 위해 ▲병원 사망진단서 ▲본국 이전 신청서 ▲방부처리 확인서 발급 ▲재외공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최소 사흘에서 최대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서 빠르게 장례절차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국내로 운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장례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GSII는 주식 차입 담당자가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실제 잔고보다 많은 주식수를 입력해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권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고, 과태료는 증권위 심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경미 하더라도 불법 공매도라면 처벌 수위를 ‘경미, 보통, 중대’ 중 보통 이상으

로만 처벌하기로 했다”며 “GSII 사안도 경미에서 보통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돼 과태료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권위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을 국내 상장사 156개 종목을 무차입 공매도 방식으로 거래한 혐의로 적발하고 75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날 증권위는 지난 2월 GSII와 함께 외국 자산운용사인 OLZ AG, 케플러체프뢰(Keppler Cheuvreux) S.A., 국내 금융투자회사 씨이에스 씨아이엠 비증권 등 3곳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금감원이 건의한 3600만원보다 늘어났다.

/나유리 기자 yul115@

미국 LA서 운구절차 진행중 유족들, 장례 조용히 치를 것

조양호 회장 유족 운구절차 준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유족, 8일(현지시간) 글렌데일의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운구절차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엘몬테

샌타모니카 로스앤젤레스

잉글우드 다우니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태평양 토렌스 레이크우드

롱비치 연합뉴스

식장과 장례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시신을 운구해 빈소를 차리려면 앞으로 사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유족들은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 대로 국내에서 조용히 조 회장 장례를 치르고 싶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유족들이 장례를 조용히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런 이유로 그룹 임원들에게도 구체적인 현지 상황이나 장례절차 검토 계획 등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